

안전한 전자금융 구현을 위한 금융감독 방향

2013.7.18.

IT감독국 IT보안팀장 정기영

목 차



2013년도

금융IT 감독·검사 업무 방향



주요 금융IT 보안 이슈 및 감독방향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맺음말



2013년 도

금융IT 감독 · 검사 업무 방향



대내외 금융IT 감독 환경 변화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

대내외 금융IT 감독 환경 변화

전자금융
거래 증가

거래규모 증가

거래 수단 다양화

IT리스크
증가

IT보안사고 발생

신규
보안위협 증가

소비자보호
강화필요

금융거래정보
보호강화

장차법 시행
('13.4월)

IT감독·검사
수요증대

선제적
감독 검사 강화

기획·테마
검사 강화

IT·전자금융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 및 이용자 보호

금융IT
감독 강화

사이버테러
선제 대응

소비자 보호
강화

IT검사
품질 제고

IT지배구조
정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실시

장애인
편의성 제고

보안테마 검사
실시

신기술 전자금융
감독강화

사고 예방중심
감독

IT감독
정책 소통 강화

효율적 검사 지원
(선택과 집중)

온라인 결제
보안 강화

보안취약점
관리·감독 강화

소비자 보안
의식 제고

검사 역량 강화



주요 금융IT 보안 이슈 및 감독방향

- 1 > 사이버테러 대응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
- 2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 3 > 공인인증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4 >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 5 >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
- 6 >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편의성 증대
- 7 >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마련
- 8 > 윈도우 XP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 9 > 금융권 전자금융관련 위기상황 연락체계 개선

1. 사이버테러 대응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1)

가. 사고 개요

3.20
사고개요

- ◆ '13.3.20(목) 5개 금융회사의 영업점 단말기(PC) 및 자동화 기기(ATM) 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영업점 거래가 중단

복구

- ◆ 사고당일 인터넷 뱅킹 및 창구영업을 재개 하였으며, 이후 영업점 PC 및 ATM도 모두 복구 완료

사고원인

- ◆ 공격자가 조직적, 장기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서버 및 단말기를 공격하여 사용권한을 탈취하고 악성코드를 PC 및 자동화기기에 유포하여 장애를 발생시킨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의 형태

1. 사이버테러 대응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2)

나. 사고이전 보안강화 대책

1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2011) 마련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제도 도입, 보안 인력 및 예산 확충, IT보안 인프라 강화

2 IT보안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 실시

- 은행·증권·보험·비은행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보안실태 점검

3 2013년 2월 이후 사이버테러 대응강화 조치 내용

- 금융전산 위기경보 조치
 -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금융전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2.12 17:00) 및 위기관리 활동 강화 요청(3.8)
- DMZ구간 내 전 서버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보안 관제 실시 지도
- 은행·비은행·보험 CIO 대상 사이버테러 대응 강화 지도

1. 사이버테러 대응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3)

다. 사고이후 조치내용

1 금융위와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 및 「금융전산위기상황대응반」 구성

◆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3.20 15:30)

2 금감원 「자체비상대책반」 가동(3.20)

◆ IT담당 부원장보를 반장으로 24시간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3 IT검사역을 현장에 투입(3.20)

◆ 사고발생 금융회사에 즉시 IT검사역을 투입하여 사고원인 및 복구조치 점검

4 보안대책 이행 철저 및 업데이트 서버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지도

5 고객피해 발생현황 파악 및 피해 발생사실 확인시 피해보상대책 방안강구 지도

6 휴일 및 급여일(25일) 대비 비상근무 유지 지도(3.22)

1. 사이버테러 대응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4)

라. 향후 대책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 방안

전산장애 발생 금융회사에 대해 사고검사 실시

- ◆ 3.27(수)부터 **사고 원인 및 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검사 실시

IT보안 실태 테마검사 및 IT모범규준 이행 실태점검 실시

- ◆ (검사대상) 은행, 증권, 카드, 보험 등
- ◆ (중점 검사/점검 사항)
 - (보안실태) IT보안 내부통제 체계, IT보안 시스템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준수여부
 - (모범규준) CISO 임명, IT보안 인력 및 예산의 비율준수 여부, 취약점 점검 및 정보기술 계획 수립, 침해사고 대응책 마련

금융전산 보안 강화 대책 마련

- ◆ IT보안 실태 테마검사 및 IT모범규준 이행 실태점검 결과 등을 기반으로 **금융 전산 보안 대책** 마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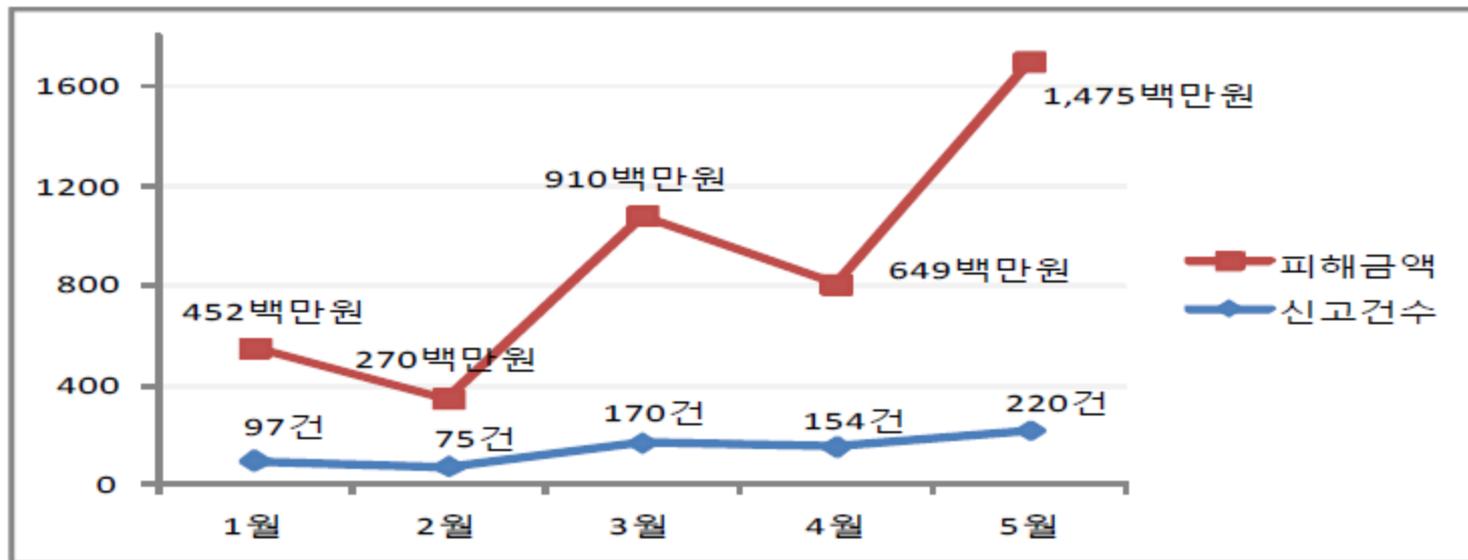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1)

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개요

- ▣ (현재)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
- ▣ (향후)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자금이체 시 이용할 단말기(PC)를 금융 회사에 등록하여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기존의 보안카드 또는 OTP 등의 본인확인 이외에 **추가 인증(휴대폰문자 또는 전화 인증 등)** 실시
- ※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체사실을 통지

<참고> 파밍 공격 피해 현황

- ◆ 전체적인 전자금융사기 피해는 감소
(’11년 8,244건 / 1,019억원 → ’12년 5,709건 / 595억원)
- ◆ 그러나,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건은 증가 추세
(’13.1월 97건 / 4.5억원 → 5월 220건 14.8억원)



< 파밍 신고 건수 및 총 피해금액 현황 (13. 1~5월) >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2)

나. 향후 계획

'13년 9.26 부터
전면 시행 예정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예정

☑ 전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철저한 준비 필요

3. 공인인증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추진방향

- ◆ 공인인증서 사용 실태를 고려할 때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경우 많은 부작용 예상
- ◆ 금융위 「전자금융인증체계 개선방안」용역 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
- ◆ 「인증방법평가위원회」운영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인증기술 도입 유도

4.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설치 배경

- ◆ 국무총리실 주관 T/F는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방법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10.5.31)
- ◆ 동 가이드라인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금감원내 설치('10.9.20)

운영 현황

- ◆ '10.10월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총 2건의 인증방법 안전성 평가 완료
- ◆ 다만, 현재까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인증방법평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 완료된 인증방법의 시장활용도 미미

조치 방안

- ◆ 인증방법 평가완료 시 관련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통보
- ◆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 도입 협조요청

5. 금융회사 IT 및 보안인력 확충 요청

관련 규정

- ◆ 정보기술 부문 사고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IT인력을 전체인력의 5%, 보안인력을 IT인력의 5% 이상 확보토록 권고

미이행시 규제

- ◆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확보를 유도

향후 계획

- ◆ 현행 권고 기준 충족 지도
- ◆ 인력 확충 방안 협조 요청

<참고> IT 및 보안인력 확충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

우수 인력 확충

금융연수원, 대학 등에 위탁교육 활성화

- ✓ 금융회사 IT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연수원, 국내 대학 보안관련학과 등에 위탁 교육 실시
- ✓ 금융연수원이 금융보안 담당자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국민은행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전문 대학원에 20명의 직원을 위탁교육 중

정보보호관련 학과에 대한 산학 연계 유도

- ✓ 금융권은 우수 IT 및 보안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과 산학 협조 강화
- ⇒ 금융권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회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IT 보안에 필요한 인력 확보 가능

위탁교육

산학연계

우대정책

IT인력 및 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우대책 시행

- ✓ IT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 우수 IT인력에 대한 승진 및 포상 등 우대 정책 시행

6.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편의성 증대

◀ 「장애인차별금지법('13.4월)」 이행 강화

장애인에 대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조속한 법 이행을 독려

◀ IT실태평가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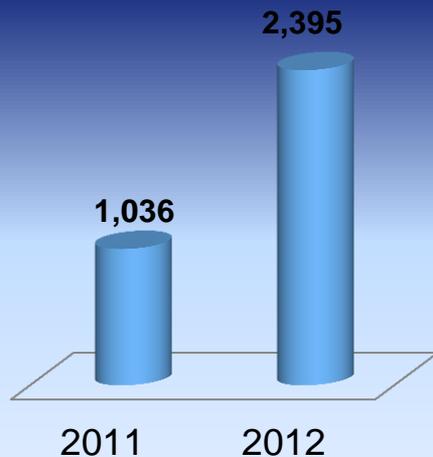
IT실태평가에
장애인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13.2/4분기 중)

7.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마련(1)

◆ 스마트폰 금융 이용자의 급증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다양한 보안위협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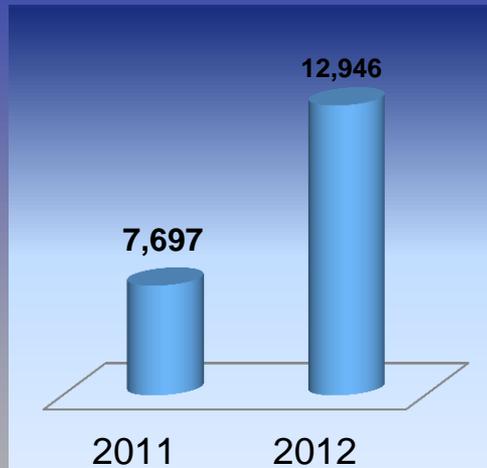
(2013년 ¼분기 스마트폰 banking 고객수 2,807만명,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18,935천건, 이용금액 1,264십억원)

스마트폰 banking 등록 고객 수
(단위 : 만명)



▲ 131.3% UP

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
(단위 : 천건)



▲ 68.2% UP

일평균 모바일뱅킹 이용 금액
(단위 : 십억원)



▲ 47.3% UP

7.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마련 (2)

◆ 스마트폰 금융 보안 위협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실행 점검

점검 기간

- ◆ (현장점검) '12.11.12 ~ 12.6
- ◆ (서면점검) '13.2.19 ~ 4.30

점검 대상

- ◆ 스마트폰 전자금융앱을 제공하는 12개사 대상
- ◆ 현장점검 제외 74개 금융회사

중점 검사

- ◆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2010.1) 및 스마트폰 앱 위·변조 방지대책(2012.6)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

7.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마련 (3)

1. 점검결과

- ◆ 은행, 카드, 보험권역의 안전대책 준수율은 대체로 양호(80% 이상)한 반면, 증권 및 저축은행 권역의 준수율은 저조
- ◆ 스마트폰 금융보안 부문의 안전대책 준수율은 전반적으로 양호(95%)한 반면, 앱 위.변조 방지 부문의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

2. 결과 조치 및 향후 계획

- ◆ 현장점검 후 미 준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 징구
- ◆ 현장 및 서면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항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 ◆ 2013년 하반기 중 현장점검 재 실시 예정

8. 윈도우 XP 지원종료에 따른 대응방안(1)

1. 현황

◆ MS사가 '14.4.8부로 PC운영체제인 윈도우 XP에 대한 지원 종료 발표

- 윈도우 XP의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

* '13.5월 기준 금융회사 전체 단말기 78만대 중 65.6만대(약 84.1%)가 윈도우 XP이하 버전 사용 중이고 CD/ATM의 경우 전체 8만대 중 7.8만대(약 97.6%)가 해당

2. 문제점

◆ 윈도우 XP지원 종료시 보안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의적인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

- 윈도우 XP는 상위버전에 비해 악성코드 감염률이 2배 가량 높고 신 버전의 IE설치가 불가하여 웹 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에 취약

◆ 문제 해결에 대한 기술 지원이 중단되어

- 윈도우 XP관련 장애 등 문제발생시 금융회사가 자체 해결 해야하는 문제점

8. 윈도우 XP 지원종료에 따른 대응방안(2)

3. 금융회사 유의사항

- ◆ 윈도우 XP 이하 운영체제를 상위 버전 운영체제로 전환
 - 윈도우 XP이하 단말기는 '14.4.8일 이전까지, 서버(윈도우 서버 2003)는 '15.7.13일까지 전환을 완료
- ◆ 운영체제 전환 이행계획 수립
 - 자체 운영체제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전환 실시
- ◆ 보안대책 및 비상 대응계획 수립
 - 운영체제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에러나 취약점으로 장애 또는 보안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계획 및 보안대책을 수립·운영
- ◆ 운영체제 미 전환 및 대응 소홀에 대한 책임 강화

9. 금융권 전자금융관련 위기상황 대응체계 개선(1)

1. 개요

- ◆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이 필요
 - 기존 유선 및 이 메일을 통한 연락으로는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에 한계

2. 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 주요 개선내용

- ◆ 위기상황 대응요구서 작성 및 요청 기능(금감원)
 - 위기상황 발생 시 위기상황 전파 및 금융회사 대응현황 파악을 위한 위기상황대응요구서 요청기능
- ◆ 위기상황 대응요구서 조회 및 대응보고서 작성 기능
 - 위기상황대응요구서를 조회하여 이에 대한 위기상황대응보고서를 작성·제출
- ◆ 전자금융사고대응 담당업무 설정
 - 담당 업무별(CIO, CISO, 문서책임자, 정보보호책임자 등) 사용자 지정

9. 금융권 전자금융관련 위기상황 연락체계 개선(2)

3. 향후 계획

- ◆ 전자금융사고대응시스템 개선사항 안내 및 담당자 등록 협조요청
 - 사용자별 담당업무 지정 및 SMS수신을 위한 연락처를 최신상태로 갱신
- ◆ 향후 긴급 상황 발생시 동 전파체계를 이용한 위기상황 전파 실시 예정
 - 비상연락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 및 위기상황대응요구서를 통한 상황 전파를 동시실시

Ⅲ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

- 1 금융전산 위기대응 체계 강화
- 2 금융회사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강화
- 3 금융회사의 보안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 4 금융 이용자 보호 및 감독 강화
- 5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노력 지원

1. 금융전산 위기대응 체계 강화

금융전산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현행)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연구원 등 금융보안관련 기관간 역할 중복
- (개선) 금융전산 보안 협의회 신설

금융권 공동
백업전용센터 구축

- (현행) 전산센터, 재해복구센터 동시 파괴 시 중요 금융정보 영구손실 우려
- (개선) 금융권 공동백업 전용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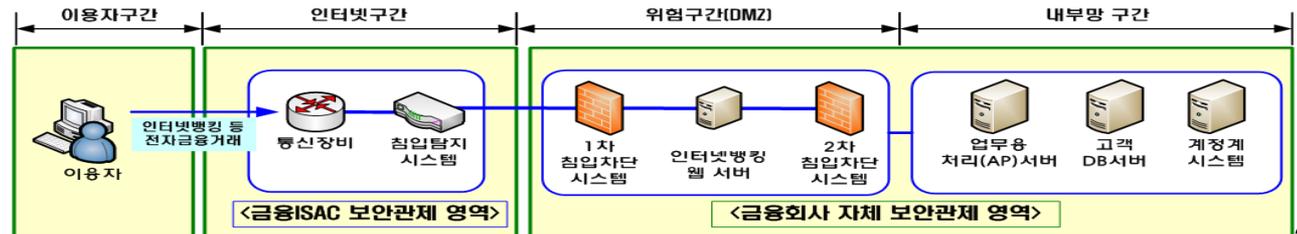
침해사고 대응전담반
운영 등 위기대응
능력 강화

- 침해사고분석 전담 조직을 금융ISAC 내 설치
- APT공격 등에 대응한 훈련시나리오 보안, 단말기 긴급 복구체계 마련

보안관제 및 정보공유
전 금융권 확대

- 전자금융거래 제공 금융회사는 금융ISAC 모니터링 의무화*
- 금융회사별 수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참고> 금융권 침해대응
모니터링 체계



2.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 보안 강화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전산센터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2014년까지)

본점, 영업점은 단계적
망분리 추진

망분리 가이드라인
배포



해킹 경로 차단

금융전산시설 내부통제 강화

CEO 책임하에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이행 철저

非금융 전산시스템도
취약점 점검 및 보안관제

전산시스템 접근 시 별도의
추가인증 적용 의무화

보안규정 위반시 내부
제재근거 마련



시설 보안 강화

금융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정보보안 및 전자금융거래
업무특성 반영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
인증 의무화

인증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평준화된 보안수준 향상

3. 금융회사의 보안조직, 인력 역량 강화



- CISO-CIO 겸직 금지
- CISO 전임자 임기보장
- IT보안위원회 운영
- CISO 정책협의회 활성화



보안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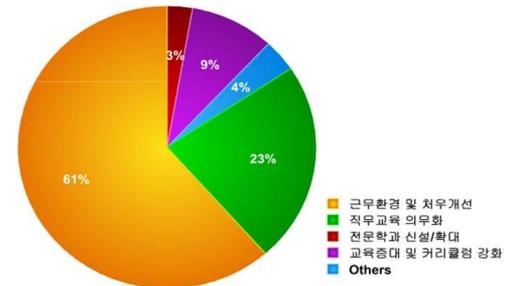


- CEO 책임하 보안인력 사기진작 방안 마련 시행
- 정보보호 관련 훈·포상 추천
- 정보보안 담당자 면책근거 마련



- 금융보안 전문교육과정 확대
- 임직원 보안교육 강화
- 금융정보보호 교육센터 운영

금융보안 전문인력 확보 방안
(출처: '11.5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전산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도모

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확대**
 - 카드사 위주 → 은행, 증권 등으로 확대
 -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체계 구축 권고
- **금융회사 사칭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 인터넷사업자(ISP)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Black List 등록)
- **보안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 시 교육·홍보 자료 배포
 - 전자금융보안사고 예방법 설명 화면 노출

금융전산부문 감독 및 검사 강화

- **금융지주회사 및 IT자회사 감독 강화**
 - 지주사자회사 검사시 소속 IT자회사 연계검사
 - 위·수탁 계약시 전산사고 책임 명확화
- **전산사고 빈번한 금융회사 집중관리**
 - 사고원인 분석 및 조치 완료시까지 이행 계획 집중 점검·관리
 - 금융전산 사고시 홈페이지 공시방안 검토
- **6개월 업무정지 등 제재기준 마련**
 -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위법·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제재부과 기준 마련

자율적 보안 강화

- ☑ IT 신기술 접목 전자금융거래의 보안가이드 제공
 - 새로운 IT기술과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유도

- ☑ 중소형 금융회사 보안 지원체계 마련
 - 금융보안 전문기관 등을 통해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취약점 점검, 보안수준 진단 등을 지원



맺음말

전자금융거래의 신뢰도 제고 및 리스크 최소화

금융당국

-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강화
- 금융권 전체 보안 거버넌스 확립
- 금융회사 IT보안 역량 강화 및 보안 취약 요소 개선

금융회사

- 자체 보안 거버넌스 확립 (보안 투자 및 인력 확보 등)
- IT 내부통제의 확립 및 보안 아웃소싱 관리 개선
- 보안시스템 설계 및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금융소비자

- 개인정보는 스스로 보호 한다는 인식필요
-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다소 불편을 감내할 필요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환경 조성 및 전자금융 소비자 보호



Thank You !